



공항에 갇혀 개·돼지 취급받는 난민들

공항 구금 난민들

입국을 허하라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공동파업

12면

노무현 사망 10년
노무현을 알면
문재인이 보인다

3면

쿠데타 실패 이후
베네수엘라
사우디 유조선 피격과
이란 갈등

6면

다시 격화하는
미중 무역전쟁과
제국주의 경쟁

7면

서평 《우리도 교사입니다》
차별에 맞서 온
기간제 교사들의
눈물과 용기

11면

공항에 갇혀
개·돼지 취급
받는 난민들

10면

다양한
노동자 투쟁

4, 5, 8, 9면

버스 임금 인상 타결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요금 인상 합의

김문성

5월 15일 파업을 예고했던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막판 타결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끝났다.

애초 버스 노동자들 다수는 1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임금이 크게 줄 상황에서 처했었다. 또한 인력을 늘리지 않은 채 개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운행 대수를 유지하려면 과속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중앙정부가 비용을 부담해 노동자들 임금에 강제 삭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14일과 15일 새벽에 서울, 인천 등 적지 않은 곳에서 노동자들은 원한 만큼은 아니어도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따냈다.

4월에 기존 임금협정이 만료돼 이번엔 타결을 한 노조를 말고도 올해 6월로 기존 임금협정이 만료돼 새로 협상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도 많다. 이 중에는 올해 주52시간 상한제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이 더 많다. 아마 이 노동자들도 이번 임금 합의에 준해서 타결이 될 듯하다.

그럼에도 임금을 올리고 인력을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는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다.

경기도는 전체가 준공영제인 서울보다 버스 운영 체계가 복잡한데, 중앙정부와 버스 업체, 주류 언론들이 일제히 요금 인상 압력을 넣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경제부총리 홍남기, 민주당 대표 이해찬까지 나서 경기도에 버스요금 인상을 압박했다.



대중교통은 서민층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이다. 버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교통 복지 확대 둘 다 필요하다.

요금 인상 문제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신경전을 벌이자 버스 업체들은 비용 부담의 짐을 덜며 득을 봤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노련, 상급단체 한국노총)이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한 건 옳았지만, 요금 인상에 반대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한 자노련이 노동조합 부문주의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아마도 자노련은 문제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곤란한 처지 때문에 파업을 막기 위해 양보할 것으로 봤던 것

같다.

이번 버스 노사정 교섭과 합의를 보면, 서민층의 압도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공공 서비스(복지)로 보고 중앙정부의 관여와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드러났다.

재정 부담 회피하는 버스 업체 사용자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준공영제보다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요구하는 것처럼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자와 서민층의 단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요컨대, 노동운동이 더 정치적으로 돼야 한다.

우파에게 유리하게 대응한 문재인 정부

버스 파업 예고는, 우파가 되살아나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협치”(우파와의 타협)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배계급 안에서도 커지는 분위기 속에서 버스업체 사용자들의 요구와 노동자들의 요구가 뒤섞여 제기된 상황이었다.

게다가 우파는 이 버스 파업을 노동시간 단축 같은 친노동 정책 탓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도 자한당은 파업 비난보다는 문제

인 정부의 무대책을 더 비난했다.

이미 기업 친화적 성장 기조를 강화해 온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적 해결에 매달린 이유다. 대책없는 친노동 개혁을 한 탓에 문제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면하려고 말이다. 중앙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요금 인상 압박을 강하게 넣었다. 아마도 국토부 관료들은 처음부터 요금 인상을 통한 해결을 고려했던 것 같다.

이미 준공영제를 실시해 온 덕에 급작스런

추가 재정 부담 필요가 적었던 박원순 서울시장
은 요금 인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며칠 버티다가 14일 요금 인상을 수용하고 말았다. 당장 수천억 원이 들어가야 하고, 출퇴근 대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민주당 대표 이해찬까지 나서서 요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을 버티기 힘들었던 것 같다. 자노련도 요금 인상을 통한 임금 인상에 동조했다.

이재명 지사의 “백의종군”이 뜻했던 바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을지도 모르는 재판의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있다. (5월 16일) 이제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친서민 개혁과 반우파 행보로 지지를 받고 지난해 경기도지사 에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부터 개시된 문재인 정부 실세들의 우파적 공세에 시달려 왔다. 이번 재판도 그런 부당한 공세의 한 결과다. 지사직을 유지하는 선고가 나와야 마땅한 이유다.

그러나 이 재판 자체가 떠들썩하게 제기된 여배우 스캔들, 부인의 트위터 의혹 등은 기소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추악한 정치 공세였다. 결국 기소해 재판을 치른 혐의는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건과 선거에서 공약을 과장 홍보했다는 것인데 죄를 묻기조차 민망한 사소한 사안들이다.

노동계급과 서민층이 정치인에 대해 중요하게 검증해야 할 사안들과는 거리가 먼 개인의 비극적인 가정사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인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고, 애초에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들에 대한 해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들이라서 자칫 경기도지사 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공격은 진문 세력의 여권 내 경쟁자 제거이자 당내 진보파에 대한 단속이었다. 문재인 정부 비판 발언들이 나왔던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박원순 서울시장도 민주당 안팎(친문과 우파 언론)에서 협공을 당한 적이 있었다. 민주당의 이런 당내 진보파 단속이 자유한국당 같은 우파에게 ‘용기’를 준 것이다.

그렇수록 진보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지지 기반인 서민층을 고무했어야 하나, 아쉽게도 이 지사는 일단 꿈을 사리는 게 낫다고 본 듯하다. 그는 지난해 말 민주당 지도부에 고개를 숙이고 “백의종군”을 약속했다. 그 뒤로 이 지사가 우파에 대해 강력하게 발언하는 일도, (진보 개혁 공약을 아직 파기하고 배신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진보 개혁을 요란하게 추진하는 것도 보기 어려워졌다.

이번 버스 파업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부장관(경기 일산이 지역구인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이기도 하다)과 함께 요금 인상 합의를 발표하는 장면을 보면, 민주당을 위한 ‘백의종군’이 무엇을 뜻했는지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 또 다시 우파 기 살려주기 목록에 사례 하나를 추가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을 위기에서 구출하는 총대를 메면서, 유감스럽게도 자기 지지 기반인 서민층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일들이 여권 안에서 반복되면 우파의 사기는 더 오를 것이다.

노무현 사망 10년 — 노무현을 알면 문재인이 보인다

김지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이 이회창을 눌렀다. 노무현은 천대받는 대중이 우파 이회창에게 가진 반감과 그들의 개혁 열망에 기대어 승리할 수 있었다. 좀더 직접적으로는 미군 장갑차가 두 여중생을 압사시킨 사건과 그에 대한 무죄 판결, 미국의 대북 강경 노선이 낳은 불안 속에 벌어진 40만 청년 촛불 시위의 수혜자였다.

노무현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평등과 정의가 구현돼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그가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고를 졸업해 판사까지 오른 경력, 노동자들을 변호한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은 그가 주류 정치인들과 다른 점이었다.

반대로 기성 권력자들과 보수 언론은 노무현이 전통적 엘리트 출신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그를 멀리했다. 동시에 그가 표상하는 대중의 진보 염원을 경계했다.

그러나 청와대에 들어간 직후부터 빠르게 노무현은 기존 체제에 타협했다. 사실 그는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 후 자신은 진보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2001년 초 대우차 부도 때 부평 공장을 방문해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거부하는 사람들과는 대화할 수 없다”고 말했고, 1998년 현대차 파업 때도 노무현은 정리해고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에 찬성했고, 기업의 이윤을 갖고 복지와 실업자 구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만 지독한 냉전주의 우파이자 주류 기득권층 출신인 이회창과 대비돼 그의 서민적·개혁적 이미지가 더욱 부각됐고,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애써 환상을 덧씌우려 한 덕분에 이런 본색이 두드러지지 않았을 뿐이다.

집권 전에 포퓰리즘을 표방해 온 점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모순 투성이였고 좌충우돌한 연사를 많이 했다. 그러나 개혁 약속을 신신히 거둬들이고 노골적인 친자본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서 나름의 일관성도 보였다.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

대선 후보 시절 노무현은 “전쟁이나 평화냐” 하며 평화를 내세워 많은 표를 챙겼다. 그러나 노무현은 2003년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을 지지하고 파병을 결정했다. 그해 2월 15일 전 세계 1500만 명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반대 시위에 나섰는데, 노무현은 정반대로 학살 동맹이 되기로 한 것이다.

이 결정은 특히 청년 지지층에서 급속한 이탈을 낳았다. 8개월 뒤 추가 파병을 결정하면서 노무현 스스로 “지지자 절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인정했을 정도다. 2004년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가 피랍됐을 때 ‘테러 세력과의 협상은 없다’고 매몰차게 외면하며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세계 패권 전



2002년 주한미군 반대 촛불 속에 당선한 노무현은 취임 직후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다

략에 협조하는 것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용적 판단이라고 포장했다. 한·미 동맹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합의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시위에 경찰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하며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미군의 대중국 압박에 도움이 될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결정했다. 한국 지배자들의 오랜 한미동맹 전략에 반기를 들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훗날 조지 부시 2세 정부의 동아태 선임보좌관 마이클 그린은 “한·미 동맹에 대한 노무현의 기여는 전두환·노태우 이상”이라며 “한미동맹이 더 강하고 좋아졌다”고 평했다. 다가올 5월 23일 노무현 사망 10주기 추도식에 부시가 참석하기로 한 것은 이런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친제국주의 행보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는가? 그것도 아니다. 온갖 협조를 다했지만 대북 압박은 완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긴장이 높아졌다. 사실 노무현의 전임인 김대중 정부도 미국을 도와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에 공병부대와 10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허사였다. 2002년 미국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해 오히려 긴장 수준을 높였다.

“비정규직의 눈물 닦아주겠다”더니

노무현 집권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은 다소 악화하고 있었다. 지배자들은 경제 위기가 노동시장이 “경직”됐기 때문이라며 노동유연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노무현은 이런 지배자들의 요구를 거스르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 경제를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혁’해 한국 자본주의의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노무현은 취임사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말하더니 얼마 뒤에는 국제

자본가들의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노조 권한을 축소시키고, 파업 발생 건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사용자들이 해고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KT는 무려 5500여 명을 명예퇴직 시켰다. 노무현은 화물연대 파업과 철도파업에 증오심을 드러내며 경찰력을 투입해 물리적으로 투쟁을 파괴했다. 그리고도 정부는 철도 파업에 7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집적하는 NEIS 도입 반대 투쟁을 한 전교조에 “단호한 대처”를 지시한 것도 노무현 자신이였다.

노무현은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반대했고, 노동자 간 임금 격차 운운하면서 ‘노동귀족론’을 들먹였다. 그러면서 정작 비정규직을 쉽게 늘릴 수 있는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2003년 10월 비정규직 노동자 이용석 씨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며 분신하는 등 노동자 3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 “노무현은 죽음으로 싸우는 시기는 끝났다”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냉대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야만적인 단속추방이 계속됐다. 2007년 무고한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처럼 가뒀던 여수의국인보호소에서 불이 나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책임 회피 : 수구 세력 포위론

2003년 말 홍세화 씨는 “민주화 시대에 수구와 개혁은 겹으로는 현란하게 싸우지만 반노동적·반민중적 신자유주의에서는 서로 만나는 멋진 공생 관계를 이룬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집권 1년 만에 정부 지지율은 25퍼센트로 추락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왼쪽의 압력을 차단할 필요를 느낄 때 가끔 ‘수구 세력

포위론’을 끄집어 냈다. 사람들의 불만을 거대 야당과 보수 언론의 ‘흔들기’ 탓으로 돌리려 한 것이다. 문재인도 좌파와 노동운동의 조급증이 노무현의 개혁 실패에 한몫했다며 이 포위론을 좌우 포위론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이 좌우 포위론은 자신을 향한 개혁 요구를 달래는 데 이용되고 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세력관계를 오판한 보수 정당들은 노무현 탄핵을 시도했다. 하지만 구세력의 권좌 복귀를 반대한 대중 저항 때문에 실패했다. 25만 명의 청·장년 시위 덕분에, 총선에서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이 오히려 심판받고 열린우리당이 압승했다.

노무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당이 과반 의석을 얻었으니 이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다시 커졌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노무현은 “열 배 넘는 장사도 있다”면서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공약을 폐기했다. 재벌 총수들을 만나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8월 초에는 이라크에 전투병을 추가 파병하고, 관련 언론 보도마저 통제했다. 4대 개혁 입법은 변죽만 울리다가 누더기가 되거나 없던 일이 됐다.

오죽하면 우파의 탄핵 시도를 좌절시킨 바로 그해 말 열린우리당 자체 조사 결과에서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보다도 서민과 거리가 먼 정당으로 꼽혔겠는가?

노무현은 개혁은커녕 개혁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미 집권 첫째 국유였던 조흥은행을 매각한 것에 이어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바꾸는 등 민영화를 위한 기초를 닦았다. 영리병원 허용, 국립대를 시장 논리로 내모는 법인화 추진도 노무현 시절에 시작된 것들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저항 때문에 민영화 정책은 정부 뜻대로 쉽게 추진되지는 못했다. 그러자 나중에는 ‘외부 충격 효과’를 노려 한미FTA를 추진했다. 그레놓고는 신자유주의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권력은 이미 시장에 넘어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형용모순의 표현으로 자신의 배신을 합리화했다.

문재인은 이 시절이 “정치 민주주의는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었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러나 이윤을 최우선하고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신자유주의와 대중의 민주적 권리 확장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구속된 노동자 수는 1000여 명에 달한다.

2003년 7월에는 인구 7만 명인 부안군에서 방폐장을 맘대로 짓는 것에 분노한 군민 1만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는데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이때도 노무현은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계엄군을 방불케 할 정도의 진압이 벌어졌다.

사상 표현과 출판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대체 입법을 추진했고(그나마 중도 하차했다), 정작 한총련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탄압했다. 파업 원천 봉쇄 공익사업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노동자 투쟁을 제약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을 한나라당과 손잡고 통과시켰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반대 투쟁이 거세지자 아예 집회를 금지하고 물대포와 진압 부대를 앞세워 원천봉쇄했다. 2005년 농민 시위에서도 농민 2명이 경찰 진압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삼성의 정치권 로비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이 폭로됐지만 농축육의 주인 공인 〈중앙일보〉 전 회장 홍석현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을 폭로하는 데 앞장선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기소됐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어찌나 컸던지 2007년 대선은 치르나마나 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비리 범벅’ 이명박이 무난하게 당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당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지도자들은 노무현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길 꺼렸다. 노무현 임기 말에 뒤늦게 노무현 퇴진 운동을 전개했지만, 이미 투쟁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전투성이 희석되고 사기가 떨어져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진실이 이랬는데도, 지금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우파의 재집권을 막으려고 문재인 정부와의 공조를 중시하다 못해 노무현 정부 시절을 미화하는 일에 동참한다. 일종의 역사 왜곡이다. 이것이 문제인 것은 당면한 노동자·서민층의 삶을 개선하거나 또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얻겠다는 전략으로는 개혁을 얻을 수도, 진보·좌파가 성장할 수도 없음을 노무현을 겪은 경험을 통해 되새겨야 한다.

한화토탈(석유화학기업) 노동자들, 혹심한 탄압에도 기본급 인상 위해 싸우다

김승주

석유화학기업인 한화토탈의 노동자들이 ‘억대 연봉’, ‘귀족 노조’ 공격에 굴하지 않고 3주 넘게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실적에 비해 낮은 임금, 기본급 비중이 낮은 열악한 임금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다. 파업 노동자들은 이 탈자 없이 매일 공장 안에서 집회를 열면서 결속과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천안에서 열린 5월 1일 세계 노동절 집회에도 대거 참가해 많은 노동자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고, 대열 선두에서 힘차게 행진했다.

5월 15일에도 서산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주최로 연대 집회가 열렸다. 같은 대산 공단 내 화학공장 노조들과 충남지역 플랜트건설 노조, 자동차판매연대노조 등 15개 노조와 단체들이 1000여 명 참가했다.

새 발의 피

5월 13일 2차 상경 집회에서 맹진석 한화토탈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한화는 5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단기 순이익의 75퍼센트를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한다. 그러나 인건비 비중은 매출액 대비 2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한화토탈 사측은 벌어들이는 수익에 견줘 ‘새 발의 피’ 수준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5월 14일 교섭에서 사측은 기존 안에서 고작 0.1퍼센트 인상한 안을 제시했다! 협상은 결렬됐고, 투쟁 중인 노동자들은 “우리를 농락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분노했다.

특히 내년은 한화가 삼성토탈을 인수한 지 5년째 되는 해로, 고용·노동조건 등을 유지하기로 한 기간이 만료되는 때다. 여러모로 사측의 공격이 예고되고 있다.

사측은 노동조항을 눈엣가시로 여기며 탄압했다. 노조 활동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각종 권리를 무시했다. 현장 감시와 통제도 강화하려 했다.

파업 중에도 협정근로(공공부문의 필수 유지 업무 같은 것)자를 임의로 선정해 현장에 복귀하라고 협박하고, 바리케이드와 쇠사슬로 공장 내 행진과 집회를 방해하면서 노조를 도발했다.

이런 노조 탄압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한화가 삼성에게서 동시에 인수한 회사 4곳 가운데 노조가 없거나 약한 곳은 모두 노동자들의 처지가 나빠졌다. 노동자들이 사측의 노조 탄압에 분노하는 이유다.

위험한 공장 가동 강행하는 사측

한화토탈 등 석유화학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면 자칫 대형 참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사측은 파업을 무력화



같은 공단 내 화학공장 노동자들과 지역 노조의 연대가 돋보였다 5월 15일 서산시청 앞 연대집회

하려고 정기 보수 후 공장 재가동을 강행하려 한다.

숙련되지 않은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보수·점검을 졸속으로 해치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파업 다음 날인 4월 26일 잔류 가스 폭발로 발생한 사고는 이런 문제를 잘 보여 줬다.

사측은 파업 노동자 탓을 하며 “안전” 운운한다. 그러나 돈벌이를 앞세우며 안전을 내팽개치는 행태를 보여 온 곳은 바로 한화사측이다.

지난해 사측은 폭발 사고를 내고도 은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기름 탱크가 밀집한 공단에서 불기둥이 치솟는 섬뜩한 장면이 4개월이나 숨겨졌다가 폭로됐다.

그룹사인 대전 한화 방산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과 올해 2월, 연달아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를 포함한 젊은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충남도와 서산시도 공장 재가동 전 안전 점검을 요구하는 한화토탈 노조와 지역 노동·시민 단체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산업재해로 이미 악명 높다.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가 충남도에 있고, 그 사망 직후 한솔제지 충남 장항 공장에서도 같은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2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지역에는 ‘죽음의 공장’으로 불리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도 있다. 화학 공장이 밀집한 서산시 대산 공단에서도 가스 폭발 사고가 빈번하다.

3월 7일 충남도지사 양승조는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를 만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산시장 맹정호는 1급 발암물질인 폐놀 유출 사고(4월 18일) 이

후 “사고를 대하는 인식과 대처하는 방안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한화토탈 사측의 공장 재가동을 방관한다면, 이것이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명을 걸고 한 거짓부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파업 무력화 중단하라

파업 초기에 사측은 ‘2000억, 3000억 원 손해 봐도 회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둥 파업이 별 효과가 없으리라고 뜬소문을 퍼뜨렸다. 파업 대오를 흔들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사측의 바람과는 달리 파업 대오는 단단히 유지됐고, 전면 파업이 이어질수록 사측의 손실은 커지고 있다. 김수환 한화토탈노조 후생복지부장은 전면적 공장 재가동이 지연되면 사측이 입은 손실은 최소 5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고되는 불황에 대비해, 이윤을 지키고 노사 세력 관계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사측의 버티기도 결코 만만치 않다.

사측은 정기 보수 기간부터 파업 중인 지금까지 멈춰 있는 나프타 분해 공장(NCC) 재가동을 엿보고 있다. 원료를 만들어 내는 이 공장이 멈추면 다른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이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고숙련 노동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사측은 파업 중인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미숙련·일반직 대체인력으로 그 일을 하려 한다. 지금도 대체인력 노동자들은 원래 4조 3교대로 하는 업무를 맞교대로 하면서 집에 가지도 못한 채 과도한 노동시간·강도에 시달리고 있는데 말이다.

한화토탈노조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화학섬유연맹 등은 5월 15일 고용노동부 서산 출장소를 방문해 공장을 특별근로감독하고 위험 요소들에 대한 행정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다.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연대

한화토탈 노동자들을 방어해 준 고마운 손길은 민주당 지자체가 아니라 같은 공장 안에서 일하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들로부터 왔다.

4월 26일 사고 직후 충남지역 플랜트건설노조는 즉각 사측을 비판하고 한화토탈 노동자들을 방어하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측의 작업 지시를 거부하라고 조합원들에게 지침을 내렸다.

석유화학 공장에서 가스 제거 작업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입 아프다. 이 작업이 미흡해서 나는 사고가 가장 많다.

그런데 가스 제거 작업은 숙련된 한화토탈 노동자들과 협력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사측이 파업 중인 노동자들 대신 투입한 인력은 숙련돼 있지 않은 데다 수도 부족하다.

사고 당시 한화토탈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한 플랜트건설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본은 5조 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다. 그렇다면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이익을 나눠야 한다. 그거 주기 싫다고 버티면서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나 같은 일용직 플랜트 노동자에게 온다. ... [한화토탈 노동자들이] 꼭 이기면 좋겠다.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거대 자본과 싸우는 노동자들이다.”

연대가 확대돼야

한화토탈 등 석유화학업계 자본가들은 오르내리는 유가와 영업 성과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기본급은 낮게, 성과급 비중은 높게 유지해 온 것이다.

석유화학업계 빅3(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은 지난해 업황이 어두워지자 곧바로 성과급을 축소했다. 기본급이 낮은 임금 구조에서는 이럴 때 임금이 큰 폭으로 삭감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화토탈 파업이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단호한 투쟁에 나서자 석유화학업계 자본가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몇몇 언론들은 한화토탈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석유화학 업계가 투쟁 확산을 염려한다고 보도했다. 한화토탈 사측이 동종업계 자본가들 눈치를 보며 겁사리 물러서려 하지 않는 이유다.

이것은 한화토탈 노동자들의 투쟁이 큰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한화토탈 노동자들의 승리가 동종업계, 더 나아가 다른 많은 노동자들의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비슷한 조건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한화토탈 노동자들의 투쟁을 자기 일처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대는 확대·발전돼야 한다. 동종업종과 지역 노조들, 더 나아가 민주노총의 실질적인 연대가 절실하다.

더 많은 노동자들을 고무할 한화토탈 노동자들의 승리를 위해 지지와 관심을 보내자.

문재인 정부 2년 지나도 남아 있는 장기 투쟁 사업장 세종호텔노조 문제 해결하라

세종호텔은 지난해 민주노총이 꼽은 대표적인 장기 투쟁 사업장들 중 하나다. 그 명단에는 KTX 여승무원, 쌍용자동차, 파인텍, 콜텍 등이 있었다. 얼마 전 콜텍까지 타결되면서 세종호텔 투쟁의 향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종호텔은 서울 한복판 명동에 있는 고급 호텔이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는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 철회와 복직, 세종노조원에 대한 임금 차별 중단, 강제전보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의 해고 철회가 특히 첨예한 쟁점이다. 김 전 위원장은 2016년에 해고됐다. 그는 임기 동안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1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단체협약(2007년)을 체결했다. 그 덕분에 대부분의 호텔들에서 외주화와 비정규직이 확대되던 때, 세종호텔에서는 정규직이 늘었다. 또, 김 전 위원장은 2012년 38일간의 파업을 이끌었다. 이런 점들이 사측이 김 전 위원장을 해고한 진정한 이유다.

세종호텔 회장이 누군지 알면, 사측이 민주노조를 끄찍이 적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주명건이 세종호텔 회장이다. 부패와 비리로 유명한 자다. 회계 부정과 횡령 등으로 2005년 대양학원(세종대학교)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뒤 2009년 7월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했다. 주명건은



2016년에 해고됐지만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 김상진 세종노조 전 위원장

친이명박계로 알려져 있다. 주명건은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지했다. 세종노조 9년의 투쟁은 주명건의 복귀와 함께 시작됐다.

법원, 개혁의 무풍지대

지난해 대법원이 김 전 위원장 해고를 인정했다. 사측은 법원 판결을 내세워 복직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해고의 정당성을 온전히 뜻하지 않는다. 양승태 사법농단은 법원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

정이 아니라 매우 계급 차별적인 판단을 내리고, 제 잇속을 위해 더러운 거래도 마다하지 않음을 보여 줬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법원은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전임 대법원장 양승태가 사법 거래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 자의 법원 영향력은 만만찮다. 그런데 양승태의 최측근 임종현이 주명건의 사돈이다. 주명건의 둘째 사위도 민중당이 작성한 적폐 판사 47인 중 한 명이다.

이러니 법원 판결에 주명건의 입김

이 작용했다는 합리적 의심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우리가 법원 판결을 최종 결정으로 존중해야 하나.

주명건조차 사법 농단과 관련해 정치적 압력이 커지자, 지난 1월 세종노조원 3명에 대한 강제 전보를 철회하고 원직으로 발령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위해 사측이 만든 부서인 퍼블릭 관리 파트(로비와 화장실 청소)를 폐지했다. 세종노조가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 사측을 압박해 부분적 승리를 거둔 것이다.

서비스연맹은 5월 9일 중앙위원회에서 총력 투쟁을 통한 세종 투쟁 승리를 결의했다. 5월 22일(수) 11시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3일(목) 서비스연맹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잡았다. 서비스연맹이 진지하고 실질적으로 대 투쟁을 구축하면 세종호텔 노조원들이 새롭게 투지를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비스연맹의 동원 계획에 더해 세종공투본도 연대 구축을 결의했다. 세종공투본에는 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노동조합들과 정의당, 민중당, 변혁당, 노동자연대 등 정치 단체들이 포함돼 있다.

세종노조의 집중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분노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개되는 시기와 겹친다. 세종노조가 더 넓은 노동자 투쟁 속에서 연대 구축을 호소하면 지지를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때마침 교육부가 세종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5월 20일~5월 31일). 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회 등이 감사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대학교 이사장 유명환은 대형 로펌 김앤장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재판을 연기시키기 위한 로비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노조 투쟁과 세종대학교 구성원들의 운동과 연결되면 주명건에 대항하는 운동의 지지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김인식

교육부의 '사학 혁신' 선포

사립유치원 비리 때처럼 요란한 빈 수레가 될 수 있다

최근 고려대와 명지대에 대한 교육부 회계 감사 결과가 발표했다. 회계 비리가 각각 22건, 10건이 적발됐다. 등록금이 부정하게 내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 요구,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 요구 등에 대학들은 '돈이 없다'며 발뺌해 왔는데, 그것이 핑계였을 뿐임도 확인됐다. 고려대 학생들은 학교 당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 밖에도 교육부는 이번 달 세종대를 시작으로 4개 대학을 추가 선정해 종합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계 감사는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회계 감사를 마친 숙명여대와 한국외대의 감사 결과는 상반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연세대·홍익대·청주대 등을 대상으로 벌인 적립금 조성·운용 실태 감사 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된다.

5월 7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사학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

겠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 계획은 다음 달 발표될 ‘고등교육혁신방안’에 담길 듯하다. 언론들은 교육부가 “사학 비리 척결의 칼을 빼 들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사립 대학들에 대한 감독은 매우 허술했다. 입시, 학사, 회계, 적립금 운용 등 대학 운영 전반을 살피는 종합 감사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한 해에 3곳에 대해서만 시행됐다.

그래서 지난해 1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1979년 이후 종합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 대학이 전체의 31.5퍼센트인 113곳이나 된다.

전국의 대학 410여 곳 중 상당수가 자체 감사를 실시하거나 자신들이 선택한 회계 감사 업체를 통해 감사를 받아 왔다. 고려대처럼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 대학도 많다.

교육부는 이를 바로잡겠다고 했고, 정말 사립 대학들에 대한 감사가 실시·강화되면 그동안 사립 대학들이

얼마나 부정한 일을 해 왔는지가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사학들은 항상 비판·개혁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우파 정부 9년간 대학 구조조정이 시행되며 대학 안팎으로 경쟁이 강화돼, 대학생, 교수·강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아 왔다. 이를 고려하면 교육부의 사학 혁신 선포를 많은 사람들이 반길 것이다.

정말이지, 사학에 대한 감독 강화와 혁신은 필요한 일이다.

또 용두사미?

그러나 유은혜 장관의 기자회견담회의 내용을 보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다음 달 발표될 ‘고등교육혁신방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재단 이사회 회의록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종합 감사 대상 대학을 1년에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늘리고, 총장 선출 제도를 여러 개 권고하는 것 정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계획에 따라 법 개정을 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해 말 ‘유치원 3법’ 개정의 좌초 사례,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실패 사례가 떠오른다.

올해 초 유은혜 장관은 ‘유치원 3법’ 개정 등에 반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집단 휴업 사태를 일으킨 것에 강경하게 대처해서,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다.

그러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이미 누더기가 된 상태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국회 다수당을 차지해 놓고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불필요한 양보와 후퇴를 거듭하다가 결국 사립학교법 개정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으로 반사이익을 얻어 우파의 기가 살아난 이때, 문재인 정부를 믿고 있어서는 우파의 압력과 회방을 뚫고 실질적 사학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한편, 유은혜 장관은 5월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이 스스로 혁신하는 방안을 찾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문을 닫는 대학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우파 정부에게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도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을 계속 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경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으레 그렇듯, 유은혜 장관은 사학 혁신 선포도 소리만 요란하고 실질적 개선은 없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유은혜 장관의 사학 공격이 현재의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더 나아가 내년 총선을 겨냥해 개혁 이미지를 얻으려는 포석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사학 비리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사람들은 교육부의 사학 공격을 ‘대승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감사 결과 등으로 확인될 사학의 부정과 비리에 맞서 독립적으로 개혁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연은정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고려대 학생

우익 쿠데타의 실패 후에도 더 불안정해지는 베네수엘라

김준호

4월 30일 자칭 ‘임시 대통령’ 후안 과이도의 쿠데타가 실패한 이후에도 긴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과이도는 닉 달 가까이 반정부 운동을 벌여 왔고, 쿠데타 실패 후에도 ‘자유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베네수엘라 대자본가들과 백인 상층 중간계급이 감행하는 정권 전복 시도 때문에 올해만 약 60명이 사망했다.

5월 11일 과이도는 미군 남부사령부 사령관 크레이그 폴러에 시한을 보내, 반정부 운동이 “승리하기 위한 [미군] 전략·작전 계획에 … 적국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노골적인 군사 개입 요청이다.

미국 해군이 카리브해에 (비무장이지만)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지사를 만난다.

미국은 5월 10일 국방·안보·통신 부문에서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기업을 모두 제재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전일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베네수엘라를 제재·압박했다. 이는 2013년에 국제 유가가 하락해 안그래도 어려운 베네수엘라 경제에 큰 부담을 줬다. 트럼프 정부가 과이도를 지원하며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급수한 결과, 베네수엘라의 2019년 국내총생산(GDP)은 765억 달러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2013년의 3분의 1 수준이다.

평범한 베네수엘라인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베네수엘라 인구의 약 10분의 1인 300만 명 이상이 경제난민이 됐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겠다는데도 귀국을 신청한 난민은 수만 명에 불과하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은 베네수엘라 자본가들의 정권 전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평범한 사람들의 안보를 대가로 친미 정권을 수립하려 한다.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전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다.

과이도는 미국의 지원을 정권 전복

운동에 이용하고 있다. 친미 정치인인 자신만이 생필품 지원을 끌어올 수 있다면서 말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매점매석과 사보타주로 서민 경제 파탄에 일조한 자들이 할 말은 아니다.

이런 자들이 현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 부패에 성공한다면 평범한 베네수엘라인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 자본가들과 우파 야당들은 우고 차베스 이래 20년 동안 있었던 친서민 정책의 잔재마저도 파괴하려 한다. 과이도의 쿠데타와 미국 제국주의 간섭 일체에 맞선 방어가 필요한 이유다.

불신

마두로 정부는 다른 제국주의 열강인 중국·러시아의 지원에 기대 난국을 돌파하려 한다.

중국은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베네수엘라에 의약품을 보냈고,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할인가에 수입했다.

그러나 이들이 평범한 베네수엘라인들의 안보를 바라며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베네수엘라를 발판 삼아 원자재 무역을 확대해 라틴아메리카 곳곳에 영향을 펼쳤다. 중국은 이 영향력을 지키려 나선 것이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경제의 ‘숨통’을 자처하지만, 베네수엘라산 석유로 2019년 1사분기 동안 약 5억 달러의 순이익을 챙겼다. 한 미국 정부 고위 관료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베네수엘라를 더 큰 지정학적 정점을 위해 [버릴 수 있는] ‘공수표로 본다’”고 했다고 한다.

베네수엘라 안에서 마두로는 주로 국가 권력으로 정권 전복 시도에 대항한다. 마두로는 최근 야당 의원 몇몇을 “반역 혐의”로 체포했고(과이도는 체포하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에 개입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속내인 듯하다), 쿠데타에 참여한 군인 56명을 퇴역시켰다.

그러나 쿠데타 측이 이에 기세가 늘



공멸한 기반과 좌절 과이도와 미국의 승리는 베네수엘라 민중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린 것 같지는 않다. 베네수엘라 우파의 아이코인 레오폴도 로페스는 “4월 30일 [쿠데타 시도로] 균열을 냈고 이 균열이 더 커져 결국 [마두로 정부]라는 제방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실제로 쿠데타를 전후해 마두로 정부 내에 분열 조짐이 있다. 4월 30일 쿠데타 시도 직후 베네수엘라 국경원(SEBIN) 원장 마누엘 피게라는 과이도를 지지할 선언했다. 미국 정부는 즉각 피게라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대법원장 마이켈 모레노도 쿠데타 발발 직전까지 양측을 저울질했다(‘워싱턴 포스트’). 쿠데타 측은 모레노를 군부를 흔든 지렛대로 여기고 모레노와 밀실 협상을 했다. 결국 모레노는 전향하지 않았는데, 이는 쿠데타 자체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새 정부 구성을 둘러싼 이런 욕심 때문이었다.

마두로는 피게라를 퇴역시켰지만 모레노는 유임했다. 국가기구 내 유력 인사들의 이탈을 막으려는 타협인 듯한데, 그러다고 위기 해결에 도움 되지는 않을 것이다.

1973년 칠레 쿠데타의 경험을 봐도 그렇다. 당시 민중연합 소속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는 쿠데타 시도가 거듭

되면서 우파가 승리하면 자신감을 얻은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더 한층 호전적인 공세에 나설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제인 정부의 과이도 지지와 측근 지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런 행보로 동아시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파병으로 도왔지만 그와 무관하게 동아시아 갈등이 심화했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한국의 우리도 베네수엘라인들의 자결권을 옹호하며 미국의 제국주의 간섭과 우파 쿠데타를 규탄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설명은 언제나 피상적이고 또 이에 기반한 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제기된 또 다른 주장은 ‘중국 팔레폰’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량이 미국의 대중 수출량보다 4000억 달러 이상 많

다시 격화되는 미·중 무역갈등

이정구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회의 때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 무역전쟁을 3개월 동안 유예하고 협상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500억 달러에 대한 수입품에 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고, 뒤이어 미국이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10퍼센트 관세를 부과하는 2차 공격을 가한 뒤 나온 발표라 그 효과가 매우 극적이었다.

그러나 5월 9~10일에 열린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실패하면서, 미국은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기존에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60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25퍼센트의 보복관세를 6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합의는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트럼프가 “중국은 보복해서는 안 된다. 더 나빠지길만 할 뿐”이라고 경고했지만 중국은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반발했다. 트럼프는 이제까지 관세를 인상하지 않았던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절차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합의는커녕 판돈이 더 커져 가고 있다.

이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중국의 오판이다.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부양하려고 연방준비제도(미국의 중앙은행)에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을 가한 것이 중국 측에 신호를 줬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계속 추진할 수 없고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기 보다 최대한 저항하는 것이 낫다는 신호였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은 언제나 피상적이고 또 이에 기반한 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제기된 또 다른 주장은 ‘중국 팔레폰’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량이 미국의 대중 수출량보다 4000억 달러 이상 많



합의는커녕 판돈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미·중 무역전쟁은 결국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 경제는 1분기 3.2퍼센트 깜짝 성장을 했고, 1969년 이래 반세기 만에 최저 실업률(3.6퍼센트)을 기록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경제 전망치를 지난해(2.9퍼센트)보다 낮은 2.3퍼센트로 예상했다. 중국과 유로존의 경기둔화, 글로벌 무역 갈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의 요인들이 미국 경제를 지난해보다 더 하락시킬 것으로 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경기불황을 의심해 금리를 인상 하려던 계획을 취소 공표했다.

사실 미국 경제가 더할 나위 없이 좋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전통적인 우방국인 일본과 캐나다에 대해 철강 관세를 인상하며, 독일과 일본에게는 자동차 관세를 인상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진실이다.

미국이 설사 일시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중국(과 우방국들)과의 무역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기 현재 우리는 세계적 패권을 중국 등 경쟁국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중 무역전쟁은 자본주의 세계 질서의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벌이는 경쟁의 한 측면만이 이해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 미국보다 덜 나빠기 때문에 중국의 승리를 바라는 일부 진보진영의 생각이 잘못된 이유이기도 하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록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갈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익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과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잠입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추자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노동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층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 질서의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벌이는 경쟁의 한 측면만이 이해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 미국보다 덜 나빠기 때문에 중국의 승리를 바라는 일부 진보진영의 생각이 잘못된 이유이기도 하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산전진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민족의 노동자를 단일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국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

사우디 유조선 피격

미국이 중동에 뿌린 불씨가 커지고 있다

김준호

미국이 에이브러햄 링컨항 항공모함 전단을 미군 중부사령부에 배치한 지 1주일도 안 돼 중동에 다시 갈등이 연쇄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미군 중부사령부는 중동과 서아시아 지역을 관할한다.) 미국 항모전단 배치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 재개를 시사하며 대응하자, 미국은 이란의 금속 수출을 제재했다. 이란의 핵심 수출품은 석유지만 금속 관련 수출도 전체 무역 수익의 약 10퍼센트를 차지한다. 미국의 추가 제재는 이란을 더욱 육죄했다는 뚜렷한 의사 표

현이다.

그리고 5월 12일 호르무즈해협에서 사우디아라비아발 선박 네 척이 피격됐다.(호르무즈해협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있는 해협으로,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이곳을 지난다.) 피격 선박 중 두 척은 사우디아라비아, 다른 두 척은 노르웨이와 아랍에미리트(UAE) 국적 선박이다.

즉각 긴장이 고조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건 발생 직후 이를 “사보타주 [의외적 공격]”로 규정했고, 미군은 이란이 배후임을 시사했다. 5월 13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이 엄

를 묻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제국주의 갈등

이 갈등의 배경에는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이 있다. 중동은 “전략적 자원”인 석유의 공급 중심지일 뿐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의 세 중심축 중 두 축, 즉 동아시아와 서유럽을 연결하는 핵심 길목이다.(또 다른 중심축은 북미다.) 그래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려 갈등도 불사한다.

그러나 역대 갈등의 주역들인 이란·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의 갈

등을 ‘친미 대 반미’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들은 미국과 동맹을 맺거나(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갈등하는(이란) 한편,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한다는 고유의 이해관계를 위해 행동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시 못할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슬람 중주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의 2013년 군부 쿠데타를 배후 지원했고 지금은 예멘에서 잔혹한 정정을 벌인다.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중동 지배자들을 불신하며(전쟁을 벌인 역사도 있

다), 특히 이란과는 최근까지도 시리아에서 심각하게 갈등했다. 이스라엘은 그런 정무로 자국의 생존과 강력한 지위를 보장받고 싶어 한다.

이란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으로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이 외려 커졌다.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친미 왕정이 타도된 이래, 미국은 이란을 매우 거슬러했고 (훗날 미국 자신이 공격한)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부추겨 이란과 8년 동안 전쟁을 벌이게 했다. 그런 데 미국의 정평이 이라크 현지 저항으로 수렁에 빠지면서, 미국은 이란의 손을 빌려 저항 운동을 잠재워야 했다. 미국로서는 ‘혹 떠러다 혹 붙인 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도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갈등에 끼어들었다. 러시아는 시리아 독재자 아사드를 지원했고, 이란·터키·이집트에 핵발전소 건설을 지원했다. 물론 러시아는(세계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지역 수준에서도 미국보다 영향력이 훨씬 적거니와 경제 위기와 제재의 타격으로 고조된 이라크, 서방과의 직접 충돌을 불사할 처지는 아니다.

오바마 정부 당시 미국은 2015년 핵협정을 체결해 이란을 회유하는 한편, 여타 동맹국을 이용해 중동 패권을 관할하는 전략을 유지했다.

트럼프 집권 후 미국은 역대 동맹국들을 더 적극 지원했다. 트럼프 정부는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

로 110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무기 계약을 맺어 친미 지역 강국들에 힘을 실었다.(물론 시리아 폭격 같은 직접 군사 개입도 했다.)

그런 맥락 속에서 트럼프는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고 경제 제재를 부활시켜 이란을 약화시키려 한다. 그런 와중에 5월 초 이란산 석유 수입 예외국 지정을 취소했다.

이렇듯 오늘날 점차 고조되는 긴장의 근본에는 제국주의 간 경쟁이 있다. 거기에 지역 강국들 사이의 갈등이 중첩되면서 불안정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 불씨가 불시에 강도 높은 충돌로 비화할 위험도 상존한다.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약속된 임금(성과금)을 대부분 지급받다

김지태

지난 5월 10일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2500여 명이 이례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벌여 사측에게 성과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사측은 노조가 제시했던 지급 기한인 5월 14일 약속한 성과금의 대부분을 하청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

사측은 1차 하청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성과금의 80~90퍼센트가량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행동의 성과다.

거제 · 통영 · 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거통고지회)는 남은 성과금도 온전히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성과금을 업체별로 다르게 지급했는데 하청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는 속셈도 있기 때문이다.

애초 사측은 1차 하청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정규직 노조와 합의했다. 그러나 거통고지회는 1차 하청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물량팀, 일당직,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거통고지회와 정규직 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이런 요구들을 내걸고 5월 16일 2차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5월 10일 집회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와 힘을 보여 줬다. 거통고지회 김동성 지회장은 당시 경험을 생생하게 말했다.

“현장 선동을 하면 끌어오르는 분위기는 느껴졌지만, 첫 집회라 얼마나 올



5월 10일 조선소에서 행진하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반응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거 잘 하면 400~500명 나오겠다’ 싶긴 했죠.

“그런데 집회 시간(점심시간)이 되자마자 한 2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속속 앉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쭈뼛거리지 않고 바로 앉는 겁니다.

“집회를 시작하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멀리서 일하는 사람들, 밥 먹고 온 사람들이 계속 붙었습니다. 결국 엄청 넓은 광장이 거의 꽉 찼습니다. 2000명이 넘는 거죠.”

노동자들은 집회가 끝나도 상당한 규모가 남아 행진을 했고 사측을 압박했다.

“집회가 끝나고도 행진에 참여한 인원이 500~600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행진해 보니, 감동받고 가슴이 터질 거 같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현장에 일하는 동료들에게 선동도 하고요.

“본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요구안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쫓아서 안 나온다. 우리가 직접 들어가자’ 해서 전체가 다 같이 본관에 들어갔습니다.

“수백 명이 본관 안에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상무가 직접 요구안을 받았습시다.”

폭발한 불만

이번 투쟁의 배경에는 조선업 구조조정 속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당한 임금 삭감이 있다. 이런 불만 때문에 사측은 정규직 노조와 올해 4월 말까지 성과금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지급기한을 넘겼던 것이다. 그러자 불만이 터졌다.

지난 3월에도 파워그라인더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여 임금을 인상했고, 지난해에는 비정규직 식당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벌여 성과를 냈다. 이런 투쟁의 전진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 정규직 노조인 대우조선지회와

거통고지회는 이번 투쟁을 함께 준비했다. 정규직 활동가들이 출근 · 퇴근 홍보전, 점심시간 홍보전 등에 참가했고, 많은 양의 대자보와 유인물도 냈다. 정규직 노조와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연대로 하청 노동자들에게 힘을 줬을 듯하다.

거꾸로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규직 활동가들에게도 힘을 주고 있다. 한 정규직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대우조선은 어디를 가도 좋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뜰씩이고 있고, 해고된 청원경찰 노동자들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전체가 ‘으쌔으쌔’ 분위기입니다.”

이런 기운이 대우조선 민영화 반대 투쟁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른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거통고지회는 투쟁을 전진시키고 노조 조직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거통고지회 김동성 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더 나아가 기본 일당(기본급)을 올리는 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집회에서 연락처를 남긴 노동자만 수백 명입니다. 이제 직접 노조 가입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성과가 투쟁과 조직화의 전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현대차 신평대리점 판매 노동자 점거 투쟁

고용을 보장하고 노조 탄압 중단하라

김우용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정규직 조합원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차 신평대리점의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과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5월 9일부터 점거 투쟁을 하고 있다. 사측이 하루아침에 대리점을 폐업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했기 때문이다.

기가 막히게도 노동자들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인근에 있는 타 대리점을 통해 소문으로 알게 됐다. 소장에게 확인을 요구하자, 그는 뻔뻔스럽게 말했다고 한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고지 없이 노조에 가입했으니 나도 여러분들한테 고지 없이 문을 닫는 거다.”

신평대리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7명 전원이 지난 1월 금속노조 판매연대지회에 가입했다. 판매직뿐 아니라 내근직 사무 여성 노동자까지 함께 가입한 것은 전국에서 두 번째다.

노동자들이 울분을 터뜨리며 노조에 가입한 것은 자린고비보다 더한 사측에 대한 분노 때문이다. 신평대리점

소장은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노동자들을 쥐어짠다. 노동조건은 열악했고, 기본적인 장려금 · 성과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20년간 책상 하나에 두 명이 앉아서 근무하게 만들고, 의자는 너털너털했고, 회식을 할라치면 직원들이 모은 경조사비를 사용했어요.”

“대리점이 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지급하는 옵션 수당을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한겨울에도 새벽 5시부터 2시간 동안 전단지를 돌리게 하고 수당도 한 푼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참고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폐업을 하고 해고까지 하다니, 너무 억울해요.”

내근 사무직 여성 노동자는 5년간 4대보험조차 받지 못했다고 했다. “소장은 매달 급여를 뺏기 위해서 지급한 후에 다시 100만 원씩 현금으로 회수해 가는 짓까지 했어요. 한 번은 매일 먹는 국밥이 너무 질려서 1만 원 짜리 밥 한끼 먹었다고 식대 3000원을 내라

고 하더라고요” 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노동자들을 혹독하게 쥐어짠 것이 신평대리점만은 아니다. 현대 · 기아차는 노동자들을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2000년대부터 위탁 판매 대리점을 크게 늘려 왔다. 대리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기본급도 없이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고, 노동자들은 끝없는 출혈 경쟁과 고통에 내몰렸다.

조직 확대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바람이 조직 확대로 나타났다. 판매연대가 무려 2년여간 노력한 끝에 지난해 초 금속노조 가입이 승인되고 불과 1년 만에 전국적으로 노조 가입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초 200여 명이었던 조합원이 600여 명으로 세 배나 성장했다. 최근 상경 투쟁에 조합원 3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노동자들의 열기도 높다.

이는 현대차 사측과 대리점주들에게 눈엣가시일 것이다.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대리점을 폐업하고 노동자들

을 해고한 배경이다. 현대차 사측은 2015년 판매연대가 처음 노조를 설립했을 때도 8개 대리점을 전격 폐업시키며 노조 악화 · 와해를 기도한 바 있다.

그래서 판매연대지회는 신평대리점 폐업을 “노조 탄압용 기획 폐업”이라고 규탄하며 적극 항의를 조직하고 있다. 15일 현재 6일째 점거 농성을 유지하며 대리점에 남아 있는 전시 차량의 반출을 막고 있다. 사측이 경찰을 동원해 퇴거명령을 내렸지만 노동자들은 꿈쩍도 않고 있다.

김선영 판매연대지회 대표지회장은 말했다. “지난해 5월 30일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후 조합원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우리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단호하게 점거 투쟁하며 싸울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연대도 조직되기 시작했다. 5월 14일 열린 농성장 앞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판매연대

지회 조합원들과 충남지역의 금속노조 조합원들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같은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정규직 · 비정규직 노조와 기아차 활동가들의 참가도 의미가 있었다.

현대 · 기아차 정규직 노조의 일부 우파 지도자들은 ‘대리점 비정규직의 금속노조 가입과 투쟁이 정규직 고용을 위협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을 성과 경쟁으로 내몰고 고통을 가한 것은 사측이다. 지금도 현대 · 기아차 사측은 비정규직 노조(판매연대지회)를 탄압하며 해고를 자행하는 한편, 영업 실적 악화를 이유로 정규직에게도 현장 통제, 임금 억제 등의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사측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싸울 때 모두의 조건을 지키고 개선할 수 있다.

현대 · 기아차의 정규직 활동가들이 판매연대지회 투쟁에 대한 지지 · 연대를 건설해 나가자. 매주 화요일 정오 농성장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도 참가하자.

올해 들어 젊은 집배원 7명 사망

정부의 약속 파기, 책임 전가가 낳은 예고된 참사

신정환

죽음의 현장인 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비극이 또 발생했다. 5월 12일과 13일 이틀 새에 3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는데, 이 중 2명은 자택에서 수면 중 심정지를 일으켰다(다른 1명은 백혈병 투병 끝에 숨을 거두었다). 심정지는 전형적인 집배원 과로사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34세 공주우체국 상시집배원(무기계약직)인 이은장 씨는 곧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사망했다. 잠든 그의 옆에는 정규직 지원서가 놓여져 있었다고 한다.

이은장 씨와 평소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던 세종우체국 소속 한 집배원은 고인의 노동조건을 생생히 이야기해 줬다.

“사망 4~5일 전에도 통화를 했어요. ‘요즘 저 힘들어요, 업무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라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비정규직이다보니 정규직이 되기까지는 관리자들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부당한 지시가 있어도 꼭 참고 [일을] 합니다.

“상시집배원들은 입사 후 1달 사이에 10킬로그램은 빠집니다. 점심시간을 제대로 지키면서 식사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은장이에게 ‘너희는 주 52시간 맞추냐?’고 했더니, ‘주 52시간은 지키죠, 서류나 전산 상으로요, 퇴근 시간 [미리] 찍어 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관리자들이 ‘시간외근무는 없다’라고 지시를 내려요.”

이은장 씨가 처했던 현실은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5년간 흑자가 2조 원이 넘는데도 노동자들은 과로사

노동조건과 비정규직의 차별과 설움을 한 눈에 보여 줬다.

적자 운운은 거짓말

집배원들의 과로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해에만 25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수치다. 올해 들어 5월 14일 현재 7명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 적자가 늘 것이라며, 비용 절감과 인력 쥐어짜기에 나섰다.

우정사업본부가 내놓은 방안들을 살펴 보면 집배원 증원 약속 파기, 토요일택배 폐지 약속 파기, 집배원 노동강도를 더 강화시킬 배달 이원화(통상우편물 배달과 택배 배달 구역 분리) 시

행, (인력 증원 없는데도) 시간외근무수당 절반 삭감과 연가 보상 일수 강제 축소 등이다. 이는 최근 연이은 집배원 사망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출근시간을 오전 8시로 당겨 시행하는 곳도 늘고 있다.

집배원들은 무료노동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동강도를 스스로 더욱 높이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집배원들은 지난해보다 체감 상 택배량이 최소 2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고 말한다.

전국의 집배원들이 전해 준 최근 현실을 들어 보면, 끊이지 않는 집배원 사망은 예고된 참사임을 알 수 있다.

“계속 누적돼 왔던 것이 터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요즘 정신적으로 스트레

스를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우편물이 줄어 든다며 시간외근무를 줄이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택배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택배] 반품 건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공공서비스답게 적자를 끌어 안고 가야지, 집배원만 쥐어짜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강경민 고양일산우체국 집배원)

“제주도는 인구 유입 속도가 전국 최고인데, 유입 인구 대비 증원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택배가 전년 대비 20~30퍼센트 가량 증가했어요, 배달 체계를 이원화월-금 일반우편물 배달조, 화-토 택배 배달조로 바꾸게 되면 이동 거리가 늘어나 노동강도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김정일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제주서귀포우체국지부장)

“우정사업본부가 얘기하는 주 5일제[배달 이원화]는 우리가 요구하는 주 5일제와 다릅니다. 우리도 남들 쉴 때 같이 쉬고 싶습니다. 이번에 공주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지만 전국의 다른 우체국도 비슷한 사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죽을 지 알 수 없습니다.”(조경훈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인천계양우체국지부장)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에 예산을 투입하라

집배원들이 연이어 죽어 나가고 있는데도, 우정사업본부는 재정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인력 증원은 없다고 못박았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이 밝혀진 다음 날 토요일근무 폐지 약속을 공식적으로 파기했다. 우정노조도 이에 발끈했다.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이 적자라며 우는 소리를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다.

우편사업과 금융사업, 보험사업 등 전체 우정사업본부 경영수지 현황은 연속 흑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흑자액만 무려 2조 2000억원이 넘는다. 이 돈이면 부족 인력을 충원하고도 남는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에는 집배원 증원도 합의했다. 연이은 집배원 사망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즉각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대폭 증원하라.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김포도시철도 노동자

최소 인력과 최저 임금으로는 안전한 개통도 어렵다

신정환

7월 27일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이 인력 총원, 임금 인상, 안전한 개통을 위한 노·사·정·시민 공동 점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포도시철도는 김포시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무인 운전 방식의 경전철이다. 김포시는 서울교통공사에 김포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탁했다(개통 후 5년). 서울교통공사는 김포골드라인운영(株)이라는 자회사를 세워 재위탁했다.

김포시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위탁 업체를 선정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예정 가격(1183억 원)보다 14퍼센트 이상 낮은 금액(1013억 원)으로 운영권을 따냈다.

서울교통공사는 그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

노동자들은 인원이 부족해 제대로 된 3조 2교대 운영조차 어렵다고 호소

한다. 임영범 김포도시철도지부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3인 1조로 운영되는데 휴가 등으로 1명이 빠지면 주간근무자가 쉬지도 못 하고 야간근무까지 해야 합니다. 때론 인원이 부족하여 2인 1조로 운영되기도 해요. 그럼 빠진 사람이 담당하던 분야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전국 최저 수준

최저 수준의 임금을 강요받고 퇴사도 잇따르고 있다. 김포도시철도 평균 연봉은 3100만 원으로 같은 일을 하는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 평균 연봉(6700만 원)의 절반도 안 된다. 6급 사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시급보다 고작 250원 많은 8600원이다. 명절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도 없다. 진급도 퇴직자가 있어야 가능해서 10년 이상 같은 직급에 머무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 노동자들은 생계비가 부족해 투잡을 뛰기도 한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안전과도 직결된다.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일부 운행 구간에서] 펄름 현상이 심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나절 만에 육안 검사로 차량 인수를 끝냈는데, 차량 문제인지 선로 문제인지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탈선 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통 전에] 점검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이재선 김포도시철도지부장)

최소 인원 때문에 모든 역사는 1인 근무로 이뤄지는데, 이 역시 승객들의 안전과 양질의 서비스를 저해한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을 바꾸고자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에 노조를 결성하고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철도 개통 전에 노조가 설립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만은 정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높은 찬성률(92퍼센트)로 나타났다.

노조는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 김포골드라인운영과의 논의 결과에 따라 집회와 파업 등 투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만

그런데 김포시와 김포골드라인운영은 노조가 “사적인 이익을 내세우며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인력 총원과 처우 개선 등의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하영 김포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선 개통에 힘을 실어 주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소”하자며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압박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인력 총원과 동종기관 수준의 임금 인상은 김포도시철도의 안전한 개통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하다.

서울교통공사는 그동안에도 자회사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간

서울교통공사는 김포골드라인운영뿐 아니라 서해선, ENG 등 6개의 자회사와 기업 내 기업 형식(CIC)으로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효율을 우선시하며 적은 인력과 낮은 임금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김포도시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비슷한 조건에 놓인 다른 경전철 노동자들에게도 자극이 될 수 있다.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처우로, 김포도시철도의 안전과 서비스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김포시와 서울시교통공사다.(그리고 문제가 많은 자회사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설립을 허용한 서울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안전한 개통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노조가 제안한 공동안전 점검도 즉각 실시하라.

공항에 갇혀 개·돼지 취급받는 난민들

공항 구금 난민들 입국을 허용하라

이현주

난민에게 공항은 두려운 공간이다. 가까스로 본국을 탈출한 난민은 공항에서 거대한 국경 장벽을 마주친다. 공항 내에서 난민에 대한 구금과 강제 송환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영화 <터미널>은 단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현실은 그보다 더 끔찍하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를 보면, 인천공항에 억류된 난민들은 루렌도 씨 가족을 포함해 모두 74명이다(2019년 1월 18일 기준). 송환대기실(사실상 감금시설)에 31명, 탑승동에 37명, 여객동에 6명이 머무르고 있다.

공항에서는 난민 신청조차 어렵다. 한국 정부는 난민심사 기회를 줄지 말지를 두고 사전 심사를 한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난민심사에 회부된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친다(총 1319명 중 648명). 2017년에는 10명 중 고작 1명만 통과했다. 나머지는 강제 송환됐거나 구금돼 있다는 뜻이다. 이 중에 소수만이 행정소송을 거쳐서 가까스로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피난처를 찾아 먼 길을 왔을 난민 절반 이상이 한국 땅을 밟아 보지도 못하고 문전박대당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난민법을 개악해 난민인정심사 회부제도를 더 확대하려 한다.

난민들을 강제 송환하고 구금하는 과정은 매우 폭력적이다. 지난해 중국 소수민족 위구르인 2인은 강제 송환 명령을 강하게 거부했지만, "[한국] 경찰 몇몇이 달려들어 위구르인 2인을 비행기에 집어넣었다."

한 난민은 불회부 결정 직후 본국으로 송환됐는데, "성인 7명이 수갑과 족쇄를 채워 강제로 비행기에 태웠고, 강제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로 머리를 밟는 등의 폭행이 있었다." (김연주)

강제 송환은 난민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유엔 난민협약 위반 사항이다.

강제 송환을 거부한 난민은 송환대기실에 구금된다. 송환대기실은 구금 시설로 조건이 너무 열악해 난민들 사이에서 악명 높다. 한 이집트 난민은 2017년 말에 송환대기실에 끌려간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거기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살 만한 곳이다. 원래 5명짜리 방인데 70명이 넘게 있었다.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고 화장실은 정말 너무 더러워서 토할 것 같았다. 투명 유리로 밖에서 경비가 방 안을 상시 감시했다."

방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도 없고 형광등이 24시간 켜져 있었다. 끼니는 매우 부실하다. 항공사들은 매일 치킨 버거와 콜라만 주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입국을 거부당한 난민에 대한 관리 책임을 난민을 태운 항공사에 지우고 있다. 항공사들이 한 국행 비행기에 승객을 태울 때 알아서 난민을 거르도록 하려는 것이다.



새로운 삶을 꿈꾼 게 죄인가 4개월 넘게 인천공항에 갇혀 있는 루렌도·바체테 씨 가족. 건강이 안 좋은 바체테 씨가 머리를 감싸고 고통을 참고 있다

항공사가 음식을 주지 않으며 송환을 압박하기도 한다. 무려 1주일 동안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난민들은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2016년에 시리아 난민들은 이런 곳에 8개월 동안 갇혀 있었다. 정부는 난민이 못 견뎌서 스스로 발길을 돌리게끔 만들려고 한다.

어처구니없게도 한국 정부는 이런 행태가 "구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단념하고, 국적국 또는 제3국으로 가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송환대기실을 벗어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구금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억지 주장은 오히려 송환대기실이 강제 송환압박을 위해 존재하는 곳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송환대기실의 비인도적 처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최근 정부는 불회부 결정을 받은 난민들을 무조건 송환대기실에 보내지는 않고 탑승구역에도 머물게끔 하고 있다. 그러나 구금돼 있다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 루렌도 가족이 바로 이런 처지다.

루렌도 가족은 제대로 먹지도, 잠을 자지도, 씻지도 못한 상태로 4개월 넘게 공항 탑승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린 자녀들은 적절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이고, 루렌도와 바체테 씨는 건강이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제 난민은 가짜 난민?

정부는 왜 이렇게 난민을 홀대하는 걸까? 정부는 국경을 통제하지 않으면 "난민제도가 악용"돼 "가짜 난민"이 몰려와 한국 사회의 안녕을 위협할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면서 경제적 동기로 입국한 난민 신청자를 대표적인 "가짜

난민"으로 지목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난민에게 가혹한 정부 행태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일 뿐이다.

대표적인 '정치 난민'인 이집트 난민도 홀대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달 불가능한 기준을 정해 두고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모두 "가짜"라고 비난한다. 난민이 처한 실제 현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루렌도 가족이 강제 송환되면 앙골라 정부에 의해 죽을 수 있는데도, 정부는 이런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왜 '경제적 동기'에 따른 기업의 해외 진출은 찬양하면서, 같은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한 가난한 이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은 비난한단 말인가.

난민들은 정착한 국가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노동자로 일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고령화 추세 속에서 한국 경제는 갈수록 이주 노동력에 대한 의존이 커지고 있다.

즉, 자본주의에서 이주민이 유입된다는 것은 부를 생산할 노동자라는 것은 것을 의미한다. 자본이 국경을 넘는 것은 경제에 이롭고 난민·이주민이 국경을 넘는 것은 사회의 부와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주장은 자본주의 체제의 거꾸로 된 세계관 - 부를 창출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자본이라는 - 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로, 1985~2015년 30년 동안 서유럽 15개국에 유입된 난민들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난민들은 거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히려 국내총생산 증가, 실업률 하락, 세수 증대에 도움을 준다고 지적한다.

많은 난민이 난민법 시행 국가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한국을 찾지만, 한

국 정부는 난민을 보호할 의지가 없다. 난민법은 보수 기독교를 기반으로 둔 데다 지독한 냉전 성향인 황우여(당시 한나라당 의원)가 대표발의했다(2009년). 난민에게 더 나은 처우가 보장되리라 기대한 난민 활동가들과는 달리, 한국 지배자들은 북한 붕괴 상황으로 탈북 난민이 대거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난민법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일 것이다.

속죄양 삼기

오늘날과 같은 국경 통제는 자본주의의 산물일 뿐 아니라 특히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강화돼 왔다. 1950~60년대에 이주노동력을 대거 받아들인 유럽 나라들도 1980년대부터 경제 위기를 빌미로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난민, 이주민들을 "마약 밀매꾼"이나 "테러리스트"와 같은 범죄 이미지와 결부시키고, "경제 난민"이라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유럽 국가들은 난민 인정 기준을 까다롭게 해 인정률을 크게 떨어뜨리고, 많은 난민을 구금 시설에 가뒀다. 이런 방식으로 난민 유입을 막지 못하자 비자를 신선했던 아예 입국을 차단하고, 국경에서 유입 자체를 막으려고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유럽 국가들이 지중해에서 벌이는 해상 전쟁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지중해는 난민들의 무덤이 됐다.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기존 사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증대하는 시기에 자본주의 지배자들은 특정 집단을 속죄양 삼을 필요가 있다. 국경 통제가 이주의 규모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런 속죄양 삼기가 노리는 효과는 노동자 계급을 분열시켜 약화시키는 것이다.

경제 위기 악화를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며 동시에 난민, 이주민에 대한 공격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자 대중의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이들은 난민이 우리와 함께 살고 일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국경 통제에도 반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경 통제는 수많은 난민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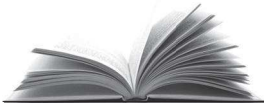
공항 구금 난민들의 조건을 다룬 부분은 다음 논문을 참조했다.

-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등, '2016년도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 김연주(난민인권센터), '출입국항에서의 변호사 접근권 침해에 대한 개선 방안 세미나' 토론문
- 대한변호사협회, '2018년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wspaper.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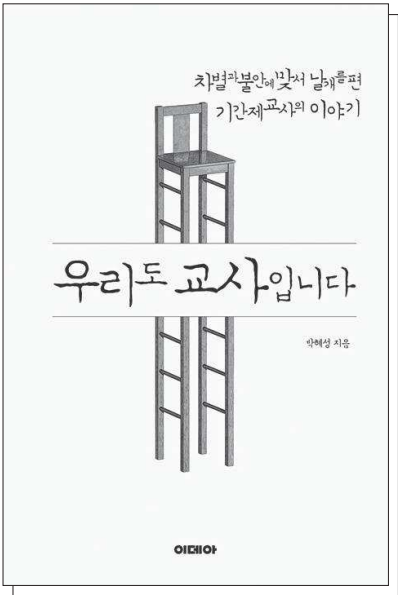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노동운동이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할까?
- ★ 역사를 기억하며 1989년 남북 자유왕래를 향한 투쟁
- ★ 수익성 악화로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항공
- ★ 남아공 총선 결과 투쟁의 필요성을 보여 주다
- ★ 전교조 결성 30주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약속을 지켜라!
- ★ 사회서비스원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조치 보잘것없다



서평 | 《우리도 교사입니다》

차별의 굴레를 끊으려는 기간제 교사들의 눈물과 용기



우리도 교사입니다

— 차별과 불안에 맞서 날개를 편 기간제교사의 이야기

박혜성 지음, 이데아, 232쪽, 15,000원

이 책의 수익금 일부는 기간제교사노조 활동에 사용됩니다.

※ 구입문의: 전국기간제교사노조 (02-334-0312)

※ 알라딘, 예스21, 인터파크, 교보문고 등 온라인 서점 및 전국의 주요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평자인 **조수진 교사**는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같은 비정규직을 거쳐 정규직 교사가 된 전교조 조합원이다.

“정당한 권리 찾기가 일자리를 뺏은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고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맞아야 할 폭풍이 있다면 당당히 맞서 폭풍을 이겨내야 꽃을 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19년 5월 1일 세계 노동절에 맞춰 파끈한 책이 발행됐다. 《우리도 교사입니다》는 지난 15년간 ‘뽕뽕 선생’으로 살아온 어느 기간제 교사가 마음으로 써 내려간 편지 같은 책이다. 저자인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박혜성 교사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 투쟁해 온 기간제 교사들의 삶을 씨줄과 날줄로 촘촘히 엮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한다. 기간제 교사가 일상으로 겪는 차별과 불안을 묘사하는 대목에서는 날카로운 시 한 편을 읽는 듯 숨이 멎고, 기간제 교사가 맞닥뜨린 순간들이 울컥울컥 올라온다.

감동적

이 책의 두드러진 매력은 쉬운 설명과 독자의 이해를 돕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다. 저자는 기간제 교사 제도가 어떻게 시작됐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정부는 왜 비정규직 교원 제도를 두고 있는지를 쉽게 설명한다. 불안정한 고용부터 성희롱 성폭력 피해 사례까지 차별과 천대의 실태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학생들의 등굣길부터 하굣길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현실, 저자는 옹게도 “기간제교사의 문제는 곧 모든 비정규직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기간제교사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알바로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자의 바람이 책 곳곳에 스며 있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부나 교육청, 학교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사이다’ 논박을 읽을 때는 답답한 속이 뽕뽕 뚫린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운운하면서도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고, 기간제노조 설립신고서 마저도 반려한 문재인 정부의 모순을 꼬집을 때는 분노의 주먹이 불끈 쥐어진다. 각 장 끝마다 글쓴이가 텅텅히 던져 놓은 질문에 뇌가

톡톡 쏘이는 재미도 쏠쏠하다.

‘뽕뽕 선생’이라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해 몰래 눈물 흘려 온 기간제 선생님들이지만, 저자는 기간제 교사들을 불안 속에서 차별을 당하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를 만들고, 성과급 차별 소송에 나서고,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투쟁에 나서며 능동적인 투쟁의 주체로서 반짝 빛나던 별과 같은 순간도 함께 보여 준다.

1장에는 기간제 교사가 된 저자의 개인적 경험이 담겨 있다. 저자는 온갖 시행착오를 거치며 교사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직접 쓴 시를 들고 찾아온 학생을 지도하면서 시를 잘 몰랐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혼자 점심을 먹는 친구가 걱정돼 돕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오류를 깨닫고 학생에게 배운다.

세계 노동절 계기수업을 하다 열혈결에 스스로 비정규직임을 고백한 날 “선생님, 힘내세요!” 응원해 준 학생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는 눈시울이 절로 붉어진다. 학생들, 동료 교사들과 부대끼며 성장하게 된 저자의 이야기는 ‘현장 교사에게 필요한 것을 임용시험이 평가하지 못한다’는 진실을 드러낸다.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고마운 나의 동료 박혜성 선생님. 저자가 학생들을 통해 깨닫고 배우며 성장했던 순간은 상처로 빚어 낸 진주 빛처럼 아름답다.

2장에서는 기간제 교사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히 다룬다. 각 소제목은 읽는 것만으로도 고용 불안, 임금 차별, 쪼개기 계약, 업무 폭탄, 성폭력 등 온갖 차별에 고통받아 온 기간제 교사의 아픔과 설움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차별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3.8 여성의 날, 5.1 노동자의 날, 12.10 세계인권 날 등 중요한 절기마다 계기수업을 하고 교과 내용을 사회문제나 학생들의 실제 삶과 결합시키려고 노력해 온 저자의 이야기는 아절하면서도 흥미롭다.

일례로, 2013년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 파업 때, 계기수업을 진행한 저자에게 민원이 제기된다. 관리자가 진술서를 쓰라고 압박하고 때는 마침 재계약 회담에 둔 상황. “진술서가 정 필요하면 교감선생님이 직접 쓰세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속으로는 떨렸지만, 당당함을 보여 주기 위해 출구를 향해 씩씩하게 걸어갔다는 후일담에서는 그 통쾌한 맛에 한참동안 배꼽을 잡으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



2018년 7월 18일 청와대 앞 기간제 교사정규직 전환 요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그 오른쪽이 고(故)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다

운털이 박히면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됐을까?

통쾌한

3장은 기간제 교사의 차별을 세상에 드러낸 세월호 희생교사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이야기를 다룬다. 학생들을 살리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만 비정규직이라 순직 인정에서 제외되고, 고작 몇천 원밖에 안 하는 사망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던 비정규직의 굴레. 살아서 온갖 차별을 받은 기간제 교사가 죽어서도 차별받는 참담한 현실이 물으로 떠오른다. 말미에 담긴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의 응원과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는 윤지영 변호사의 메시지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건네는 위로이자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활력소다.

4장에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등장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현실, 비정규직 폐지와 정규직화를 요구해 온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이 쟁점에서는 혼란을 겪고 흔들린 문제들을 저자는 찬찬히 되짚는다.

정규직 교사들이 다수 속에 있는 전교조 집행부의 입장이 나오는 대목은 더 나은 삶과 교육을 위해 투쟁하고 연대하는 모든 이들이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이다. 저자의 글을 읽다 보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비정규직 교사뿐 아니라 정규직 교사들에게도 이롭다는 것, 무엇보다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마지막 장에 이르면 가수 윤도현 밴드의 어느 노래를 흥얼거리는 자신을 발견할 지도 모른다.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워우워 어~~~”. 겹질을 깨고 나와 이제 막 날개를 편 기간제 교사들, 혼자라고 생각하며 숨죽이고 있었던 기간제교사들이 함께 뭉쳐서 날갯짓을 할 때 불려일으킬 나비효과를 상상하면 행복한 웃음이 번진다.

기간제 교사로 “매학기 또는 매년 이별을 반복하는 것이 익숙해질 만도 한데 언제나 마음 한 편이 쓰리다”는 저자. 2019년 어느 봄날 저자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건넨 이 편지의 마지막에 다다르면 이 책에 담긴 첫 마디가 울컥 울컥, 그럼에도 두뼉두뼉 올라온다.

“우리도 교사입니다.”

일상의 차별과 천대를 투쟁으로 승화시킨 진솔한 이야기인 《우리도 교사입니다》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기간제 교사들의 빛나는 용기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이 책을 사서 자신이 읽거나 옆자리 동료 교사에게 선물하거나, 책 읽기 모임에서 함께 읽어도 좋다. 학교 도서관에도 신청해 두면 학생, 교사, 직원들도 함께 나눌 수 있다.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 노동자가 아니어도 쉽게 이해하며 두루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기간제 교사들의 아름다운 비행을 응원하는 모두에게 일독을 권한다.

“이 책이 마중물이 되어, 학교의 진정한 구성원인 교사 직원 학생이 더 나은 교육과 행복한 학교를 위해 손을 맞잡게 되길 희망해본다.”

19년째 열리는 커서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2019

8월 22일(목)~25일(일) 장소 : 서울 주최 : 노동자연대

marxism.or.kr

02-2271-2395, 010-4909-2026, marxism@marxism.or.kr



5·21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공동파업

“계약 만료 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월 21일 공동파업에 나선다. 3개 산별연맹이 함께하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동투쟁 연석회의’는 5월 15일 3차 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 계획을 결정한다. 이번 호에는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투쟁 소식을 신는다. 지면 제약상 신지 못한 인터뷰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인터뷰·정리 강철구·장호중·정성휘]

손상량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시설분회장 “부산대병원이 먼저 뚫겠다는 각오로 싸울 겁니다”

부산대병원에서 5년 일했습니다. 딱 최저임금에 연차수당 외에는 10원도 없었습니다. 저처럼 5년을 일하건 10년을 일하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있던 노동조합은 민주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측과 유착해 있다고 느껴졌고, 위원장의 눈 밖에 나면 바로 재계약에서 탈락될 위협을 당했습니다. 처음 대의원이 된 제가 바른말 좀 했다고 저도 위원장의 눈 밖에 났습니다. 그래서 아예 뜻 맞는 조합원들과 함께 지난해에 기존 노동조합을 엮어버리고 민주노총에 가입했습니다.

민주노총 간부들과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정규직 지부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부산대병원 정규직 지부와 우리는 한 몸처럼 느낍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처음 제주 영리병원 반대 투쟁에 참가할 때는 ‘우리 병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데 왜 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활동에 참가하고, 생각도 많이 하면서 다른



손상량 지부

병원의 문제와 우리 병원의 문제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1980년에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 하나 살리려고 파신도 시키고 했는데 평생 그 경험을 모른 척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모른 척했던 게 다시 생각이 납니다. 사회 정의라는 것이 이곳에 있구나 하고



진미영 기자

4월 20일 청와대 앞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대회’ “함께 싸우며 자신감이 생기고 있어요”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21일에 100명 넘는 조합원들이 파업하고 교육부 앞으로 갈 겁니다. 시설분회에서는 3분의 2가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투쟁을 하면서 이렇게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은 비정규직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지금 14개 국립대병원이 함께 싸우고 있는데 부산대병원이 무조건 먼저 뚫겠다는 각오로 싸우고 있습니다.

정년을 미끼로 자회사 방안 압박하는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정규직 노조는 기업노조인데, 아쉽게도 우리 투쟁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전국의 대학 병원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니 큰 힘이 납니다.” (윤병일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 분회장)

분당서울대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1800명이나 된다. 국립대병원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 <의학신문>을 보면, 국립대병원의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평균 45.76퍼센트였다(2016년). 그런데 분당서울대병원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11곳 중 유일하게 인건비 비율이 40퍼센트를 넘지 않는다(34.56퍼센트). 2018년 분당서울대병원의 세 전순이익은 271억 원으로 서울대병원보다 무려 4배가 많은데도 말이다.

병동에서 일하는 강미경 조합원은 말한다. “우리는 서울대병원 본원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병원 병동 사원은 직고용이고 우리는 간접고용이라 월급 차이가 100만 원이 나요.”

인력을 확충하지 않으니 노동 강도도 매우 높다. “투석실에 침상이 29개 인데, 오후에 응급 환자 몰려오면 너무 바빠요. 어떤 날은 토할 것 같습니다.”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환자 직접 부서’와 ‘환자 간접 부서’로 나눠 일부만 직고용하고, 직고용 방식도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공개 경쟁 채용 방식으로 하려 한다. 정년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한다(정년 단축).

그러나 청소 업무든 환자 이송 업무든 환자와 관련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형평성’ 운운하며 정년을 단축하겠다는 것은 잘 조직된 미화 노동자들을 흔들려는 시도다. 자회사를 받아들이면 정년을 유지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은 “별도의 정년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윤병일 분회장은 “정규직 전환한다고 해서 임금이나 복지, 연금을 정규직과 똑같이 줄 것도 아니면서, 정년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측의 논리를 비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해 처우를 개선해 왔다. 한 미화 노동자는 투쟁을 통해 처우를 개선해 온 것에 자부심을 보였다. “2013년에 월급이 10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민주노총으로 옮겨 투쟁을 하니 상여금과 교통지원비도 생기고, 식비도 인상됐어요.”

노동자들은 지난해 연말 사상 첫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파업으로 인한 즉각적인 성과(상여금 4만 6000원 인상)가 노동자들의 기대에 미치지지는 못했지만, 노조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파업에 참여해 병원에 타격을 준 경험은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였다.

이제 노동자들은 그동안 다진 조직력과 투쟁력을 바탕으로 직고용 전환 투쟁에 나서고 있다. 현재 쟁의권이 없어 21일 공동 파업에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같은 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

박일순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장

“정규직화를 위한 공동투쟁, 엄청 힘 받고 있어요”

경북대병원은 서울대병원 하는 거 보고 [전환 방식]을 따라 하겠대요. 그래 놓고는 우리가 천막농성을 할 거라고 하니깐 그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울대병원에 얘기하세요’ 했어요.

5월 21일에 우리도 같이 파업해요. 지난해 얻은 파업권이 그대로 있거든요. 21일에는 칠곡병원 민들레분회도 파업권이 생길 거예요. 주차 노동자들도 파업에 참가할 수 있을 거예요. 버스 4대 정도 타고 교육부 앞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파업권을 잘 활용해야 해요. 6월 말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회사가 떠나 버릴 수 있어요. 용역업체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파업권이 없어져요. 한순간에 임금도 삭감될 수 있어요.

파업하면 임금이 삭감돼 힘들긴 하지만, 지금 인증평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뒤집고 치우고 난리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인증평가 때 파업하자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도 정 안 되면 하반기에 정규직도 같이 싸워 보자 하고 있어요. 3개

산별연맹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정규직들도 다 오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경북대병원만 해도 비정규직이 이렇게 같이 파업하는 일은 처음이에요. 병원 측도 좀 놀랐을 거예요. 이전보다 조합원이 훨씬 늘었거든요. 우리 [노조]가 100명 넘는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385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었어요. 정규직 되자고 이렇게 많이 가입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힘 받고 있어요.

이제 갓 서른 살 넘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여기 농성장에도 계속 찾아와요. 원무과뿐 아니라, 전기·시설 쪽은 다 젊거든요.

정규직 분회도 많이 늘어났어요. 대구지부가 지난해 3000명을 돌파했어요. 수백 명이 새로 노동조합에 가입했어요.

대구 지역이 분위기가 좋아요. 얼마 전에는 영남대병원에서 해고되신 분들 복직 위해서 1박 2일 행진도 같이 하고 했잖아요. 대구에서는 노조[상급



박일순 지부

연맹]을 떠나서 자주 오고 가고 해요. 5월 15일에는 민주노총 주최로 2,28 민주운동 기념공원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규탄 집회’를 해요. 경북 대학교병원으로 행진도 할 거예요.

정규직 분회도 많이 도와 주고 있어요. 농성 천막도 주말에는 비정규직이 지키고 평일에는 정규직 분회가 지켜요. 팻말 시위도 대의원들이 계속 나와서 돕고 있어요. 16일에는 정규직 분회가 로비에서 중식집회도 하기로 했어요. 많이는 안 나와도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